

# 민주당, 예산안 7000억 추가 삭감·내란 특검발의 등 총공세

대통령실 수행사업 예산 추가 삭감  
내란혐의 상설특검, 거부권 행사 못해  
김건희 특검법도 네 번째 발의  
수사 대상, 15가지로 대폭 증가

민주당이 삭감 예산안 증액 협의의 전제조건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내걸고 내란 상설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 원안에서 4조 1000억원을 삭감해 예결위에서 처리한 삭감 예산안에서 추가로 7000억원을 깎겠다는 방침을 8일 밝혔다. 민주당이 추가 삭감한 7000억원은 전직 대통령 경호와 대통령 비서실 직원 급여, 여론조사 등 대통령실 수행 사업 예산이다. 민주당의 추가 삭감 예산안은 계엄 상황 등을 반영했다.

예산안 협상의 상대방인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사의 표명으로 공식이 돼 있어 증액 협상의 장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이 열릴지조차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한 10일에 강행처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우 의장을 찾아 예산안 처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우 의장과 면

담 후 기자들과 만나 "대외신인도 유지와 경제안정을 위해 여야 합의에 의한 예산안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여야협상의 물꼬를 큰 리더십으로 터달라고 요청드렸다"라고 밝혔다.

이에 우 의장은 "비상계엄 사태가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국회의원들을 제

포하려는 기도였었고 결국 그로 인해 국회에서의 예산안 논의가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고 국회의장실 관계자가 말했다.

이외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야당 주도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처리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6일 발의된 상설특검은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일반 특검이 아닌 상설특검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일반 특검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2·3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태와 관련한 특검법은 수사 대상 범위를 지금 발생했던 내란 행위와 관련된 일체의 의혹을 다 포괄해 수사 대상 범위에 포함시켰다"며 "특검 추천 방식은 야당, 국회 추천은 완전히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한명씩 추천해 세 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요한 특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설특검법이 처리되고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상설특검이 진행되면 일반특검과의 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반특검법은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과 인력을 그대로 흡수해 오늘 제출한 특검이 최종적인 수사 주체가 되도록 했다"고 했다.

민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지난 세 번째 특검법보다 대폭 증가한 15가지에 이른다. 특검 추천 방식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해 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방식 등이 적용된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8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조지호 경찰청장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12일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선 '내란 일반특검'과 '김건희 특검', 박 장관·조청장 탄핵안을 모두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尹, 직무배제 상태?... 대통령 권한 행사는 '여전'

尹, 사생활 공개활동 중지 상태지만  
자진퇴사 의사 없어... 대통령직 유지  
2선 후퇴, 헌법상 불가... 野 "탄핵 필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2선 후퇴를 시사했지만,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와중에 법무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조치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사과하고 임기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후 관저에 머물면서 여론과 정치권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주 월요일에 있던 대통령주재 수석 비서관회의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도 모두 열리지 않았다.

대통령실 역시 침묵을 지키고 있다. 사실상 공개 활동은 중지한 상태. 그러나 이같은 상황을 '직무배제'라고 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 외국에 국가를 대표하며, 국군통수권을 갖고 있다. 공무원 임면, 조약 체결, 외교사절, 선전포고·강화, 계엄선포 등 권한도 대통령에게 속한다.

또한 헌법에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등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궐위는 '대통령 사망 또는 사임으로 직위가 공석이 된 경우', 사고는 '질병·해의 체류 또는 기타 사유로 대통령 직

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다.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표결이 불발됐고, 윤 대통령은 자진사퇴 의사를 밝힌 바 없다. 즉 윤 대통령은 법적으로는 대통령직을 유지 중이며, 대통령의 권한을 여전히 행사할 수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에 대해 '직무배제 상태'라고 언급한 것은 헌법상 근거가 없는 발언인 셈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전날(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재가했다. 행안부는 전날 대변인실 명의로 "이상민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그 사의가 수용되어 입장문을 보낸다"로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의 사의를 재가했다는 의미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의 임면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

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탄핵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 6일 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후임으로 오호룡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을 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관급인 진실화해위원장에 박선영 전 의원 임명안을 재가하기도 했다.

또 이날 국방부는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은 아직 대통령에게 속해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대통령의 '2선 후퇴'는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공표한 셈이다. 이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2선 후퇴'는 존재하지 않으며, 직무정지를 시키려면 탄핵이 필수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다 체포·구속 등 구금될 경우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현행 헌법에서는 이같은 상황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서다.

이에 대해 검사 출신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통령의 옥중 집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질서 있는 퇴진은 헌법에 규정된 탄핵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 본부는 전날 윤 대통령을 내란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3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조치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며, 현 상황에서 대통령 업무를 수행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서예진 기자 syj@

## 비상계엄 여파...尹 지지율, 취임 후 첫 10%대 기록

17.3% 기록... 직전 조사比 7.7%p 급락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급락하면서 취임 후 처음으로 1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여야 정당 지지율 격차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예너지경제신문 의뢰로 5~6일(12월 1주차) 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 묻는 결과 '잘하고 있다(긍정평가)'는 17.3%, '잘 못하고 있다(부정평가)'는 79.2%였다. 이는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10%대에 들어선 조사다.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7.7%p 포인트(p) 낮아졌고, 부정평가는 같은 기간

8.2%p포인트 높아졌다. 긍·부정평가 간 격차는 61.9%p포인트다.

권역별 지지율은 모든 권역에서 하락했다. 가장 크게 하락한 지역은 보수정당이 강세인 부산·울산·경남으로, 14.3%(14.9%p포인트↓)였다.

연령대별 지지율은 20대에서 1.2%p 상승했고,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하락했다. 가장 많이 하락한 연령대는 핵심 지지층인 60대로, 18.3%(16.0%p포인트↓)였다.

이념성향별 지지율은 보수 31.4%(13.6%p포인트↓), 중도 14.3%(7.6%p포인트↓), 진보 6.3%(3.5%p포인트↓)로 나타났다.

지지율 일간 지표는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 5일(목) 19.1%를 기록한 데 이어, 다음날인 6일(금)에는 15.5%

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율 역시 하락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최대 격차를 보였다.

같은 기간 진행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26.2%, 민주당은 47.6%로 집계됐다. 이어 조국혁신당(7.3%), 개혁신당(4.3%), 진보당(0.8%) 순이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11.5%였다.

직전 조사에 비해 국민의힘은 6.1%p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은 2.4%p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10월 5주차(29.4%) 이후 5주 만에 다시 최저치를 경신했다. 아울러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지지율 차이는 21.4%p포인트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



8일 오후 울산시 남구 롯데백화점 울산점 정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파로 볼 수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곧바로 17.5%(2016년 10월 26일 조사)를 기록하며 20%대가 깨진 바 있다.

한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조사와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

(3%) 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포인트였고 응답률은 4.8%였다. 무작위생성 표집들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 기자